

#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의혹 진상 밝혀라”

### 국민의당 “대통령의 비상조치 마지막 기회”

### 새누리당 “진상규명 필요”...靑 “국정 흔들기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9일 ‘처가 부동산 매매’, ‘정운호 전 내이처리퍼블릭 대표 변론’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했다.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즉각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하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으면 조사하기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국민들이 부정부패 근절의 의지를 판단할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은 눈을 확 뜨시고 귀를 생생히 보셔야 한다. 서민경제는 죽었고 흥기택, 나향욱, 진경준, 우병우 사태에서 보듯 공직기강은 땅에 떨어졌다”며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면적인 개각을 하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참모를 정리할 때”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비상상황이라고 직감

하고 있다”면서 “어쩌면 박 대통령께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에게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각종 약재가 잇달아 터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이 깊어가는 분위기다.

한편 청와대와 우 수석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전날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의혹에 대해 “중개수수료 10억원을 준 정상적인 거래로, 진 김시장과 상관없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이날 “최근 안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확인이 안 된 의혹에 대해 일방적인 정치공세나 국정 흔들기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

들과 만나 “근거 없이 의혹을 부풀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단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단합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자신이 정 전 대표를 정식 수임계도 내지 않은 채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보도와 관련해 “100% 허위보도다.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보도를 한 언론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 본인과 청와대가 언론의 의혹 제기기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을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최저임금제도 개선 위해 노력”

### 환노위野·최임위勞 성명... “최저임금, 월 가계 지출 못미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19일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형편 없는 수준의 인상률로 국민에게 참담함을 안겨줬다”며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과정을 공개하고, 공익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추천하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로부터는 자기검열과 정부의 입김으로 자유로운 재량권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위원

들의 최저임금위 사퇴 방침을 밝히며 “기울어진 운동장과 다름없는 최저임금위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일·송옥주·신창현·이용득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최저위의 근로자위원 7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이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날 정문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최저임금위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조율하는 파행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월 가계지출인 166만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친박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 휘청거리는 새누리

### 비박 “친박 해체” vs 친박 “음모”... 서청원 “당권 불출마”

4·13 총선 참패 후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휘청거리다가 혁신비대위 출범으로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아가던 새누리당이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의 4·13 총선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또 다시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비박(비박근혜)계는 진상 규명과 ‘친박 해체 선언’을 주장하며 맹공을 가하고 있는 반면 친박계는 ‘조직적 음모’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더욱이 최·윤 의원의 공천 개입이 사실상 서청원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 의원이 이날 당대표 도전의 뜻을 접는 등 8·9 전당대회 구도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우선 비박계 당권주자들은 19일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사법기관을 동원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대표 도전자인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당에서 진상조사를 해 조속히 이번 파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친박들이 계파 해체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 당대표 후보인 김용태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지난 8년 전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고 한탄했다”며 “이번 소위 친박 중의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벌인 이 일 역시 국민도 속고 대통령은 속으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타격을 받은 친박계는 존폐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조직적 음모론’을 퍼며 수세 탈출을 시도하고 나섰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날 “최·윤 의원의 행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녹취록이 공개된 시점만 놓고 보면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녹취록 공개의 배후에 특정인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특정인’에는 정병국·주호영·김용태 등 비박계 당권주자와 함께 김무성 전 대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친박계 의원은 “김 전 대표도 공천 당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대희 전 대법관의 지역구 이동을 종용하지 않았느냐. 비박계라고 다를 게 없다”며 “김 전 대표 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선관위 “의뢰 오면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인 최경환·윤상현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소속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 녹취가 공개된 것과 관련, “조사 의의가 있으면 확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사 의의가 있을 경우 이번 사안이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37조의 경선 후보자 협력에 해당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모수 찾기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친인척 보좌진 채용개선 논의 착수

### 국회 사무처 공청회... 이달중 윤리법규 개정

국회는 19일 오후 사무처 주관으로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등 윤리법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윤리법규 개선안을 세부적으로 짜서 이르면 이달 중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입법조사처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미국은 연방법으로 친인척 보좌진 임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논란 끝에 총리 자문기구 친인척은 1명만 고용하도록 제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입법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건 해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헌법상 공무원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위한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혹다 이현철 정의와 겸임교수는 “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는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6촌 이내는 1명까지 신고하면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외대 김성수 행정학과 교수는 “유능한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친인척 채용보다 특히 채용이 문제다. 보좌진 전문성을 제고할 제도 보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결국...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 중앙징계위 확정

중앙징계위원회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인사처)가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파면은 이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징

계다.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연금은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나 전 기획관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심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